

오늘 >>> 7면

SK총수 형제, 나란히 재판정에 서다

승부 >>> 16·17면

명장의 전설, 퍼거슨 대 벵거

김형태 변호사의 비망록 >>> 26면

영안실 때려부순 지옥도를 아십니까

커버스토리 3·4·5면

## 제돌이의 운명

14일 제주서 ‘야생방사’ 세기의 재판  
불법포획 돌고래들은 자유를 얻는가



##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컴퓨터 청와대 행정관이 부숴라 지시”

정부관계자 ‘한겨레21’에 밝혀  
“민정수석실과 얘기 돼있다 말해”  
‘총리실 소행’ 검찰발표와 배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의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거 인멸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2일 “최종석 청와대 전 행정관이 2010년 7월7일 오전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내일쯤 검찰에서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한다고 한다. 오늘 중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 지원관실 점검팀의 컴퓨터 전체와 진경락 (지원관실) 총괄지원과장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조치해라’고 지시했다”고 <한겨레21>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전 행정관이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깨부수든지, 컴퓨터를 강물에 갖다버려도 좋다. 민정수석실과 이미 얘기가 다 돼 있어 검찰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7월9일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고 이에 앞서 장 전 주무관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업체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싱(강한 자력으로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파괴하는 것)했다.

정부 관계자의 이런 주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진경락 전 과장이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장진수 전 주무관, 권중기 전 조사관이 실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지원관실 소행’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 발표와 달리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검찰과 수사방향을 사전 조율까지 한 것이다.

최 전 행정관은 증거 인멸에 사용된 ‘대포

폰’을 개설해 지원관실에 건넨 인물로, 지원관실 설치·운영에 깊이 개입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직속 부하직원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당시에도 청와대가 증거 인멸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 주미한국대사관 주재관으로 발령받아 현재 미국 워싱턴에 있다. <한겨레21>은 최 전 행정관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으나, 그는 “운전중이라 통화하기 어렵다.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청와대의 증거 인멸 지시 의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1만여쪽에 이르는 민간인 사찰 수사·재판 기록에서 드러난 부실수사 정황 및 추가 불법사찰 의혹 등은 3일 발행되는 <한겨레21> 901호에 나와 있다.

조혜정 <한겨레21> 기자 zesty@hani.co.kr

남방큰돌고래 ‘제이비디(JBD 09)’는 3년 전만 해도 한라산 아래에서 헤엄치던 돌고래였다. 제이비디 09는 이제 ‘제돌이’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묘기를 부린다. 10여년 전에 잡혀 온 금둥이, 대포와 함께 점프를 하고 기록기록 노래를 부른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돌고래 공연업체인 퍼시픽랜드에 사는 태산이(JBD 20), 춘삼이(JBD 21) 등 6마리도 마찬가지다.

국내 처음으로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자는 야생방사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서울대공원과 퍼시픽랜드에서 쇼를 벌이는 남방큰돌고래는 불법 포획된 개체들”이라며 “그물에 걸린 돌고래를 방사하도록 한 수산업법에 따라 이들을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퍼시픽랜드는 1990년부터 어민들과 미리 짰 뒤 남방큰돌고래가 그물에 걸리면 700만~1000만원에 사들였다. 2009~2010년에만 11마리를 잡았고 이 가운데 1마리인 제돌이는 서울대공원에 팔렸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7월 해양경찰청 수사로 알려졌다. 검찰은 퍼시픽랜드 대표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제보호종인 남방돌고래는 그물에 걸리면 바로 풀어줘야 하고, 죽어서 발견된 경우에도 해양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돌고래를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세기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퍼시픽랜드에 남아 있는 돌고래 7마리 가운데 6마리(나머지 한 마리는 수족관 탄생 개체)를 몰수 대상으로 지목했다. 서울대공원 돌고래는 정당한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몰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8월 첫 돌고래 재판이 열렸다.

판사: “감사, 구형은 몰수형으로 할 생각인가요?”

검사: “그렇습니다.”

판사: “돌고래들이 방사되면 자연 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피고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셨죠?”

퍼시픽랜드 변호인: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래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생존 가능성이 대해 답하기가 곤란하지만, 제주대학교 등은 사전검인을 전제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는 국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위 사진 오른쪽)가 공연을 하고 있다. 제돌이는 2009년 5월1일 제주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것을 불법으로 잡아 거래됐다. 현재 추세라면 남방큰돌고래는 2050년대 20마리 이하로 줄어들어 사실상 멸종에 가까워진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고래연구소 제공

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산다. 국립수산물자원 산하 고래연구소는 2007년부터 야생에서 개체식별번호(JBD)를 붙이는 조사를 하면서 이 돌고래들이 우두머리 한 마리가 통솔하는 114마리 집단임을 확인했다.

<한겨레>가 남방큰돌고래를 제주 앞바다에 풀어줄 경우 야생 무리에 합류할 수 있을지 국내외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수석과학자 나오미 로즈 박사는 “원래 살던 곳에 야생방사장을 설치하고 야생적응 과정만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출신 법고대 권위자인 폴 스톱 박사도 “산 먹이를 공급하면서 인간 접촉을 줄이고 전에 함께 살던 무리 옆에 방사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래연구소도 이런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퍼시픽랜드의 돌고래들은 잇따라 폐사하고 있다. 2009~2010년 야생에서 가져온 돌고래 11마리 중 이미 5마리가 숨졌다. 퍼시픽랜드 관계자는 “한 마리는 올 때부터 피부 농양이 있었고, 나머지는 폐렴 등으로 죽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퍼시픽랜드 전직 직원들은 “아무리 수족관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이 죽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돌고래쇼가 노예제를 금지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되는 등 전세계에서는 돌고래 방사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재판부에 돌고래를 풀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세계의 눈은 점차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두번째 재판에 쏠리고 있다.

제주/남종영 기자 landg@hani.co.kr

나경원 남편 ‘기소 청탁’ 의혹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주진우(39) (시사인) 기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구인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검찰이 “김 판사에게서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박은정(40) 부천지청 검사의 진술을 받아들인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주진우 기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주 기자가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스크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설명은 그동안 경찰이 “우리는 주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

## “경찰, 주진우 기자 체포하려했다”

검찰 “박은정 검사, 청탁 받았다 진술해”...박 검사 사의표명

제구인을 시도한 적도 없고,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박 검사가 “청탁을 받았다”고 밝힌 이유를 설명해준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박 검사로부터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는 김 판사의 ‘의견 표명’을 ‘기소 청탁’으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애매하게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검사가 김 판사에게서 기소청탁을 받

았다고 시인한 녹취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녹음을 한 주체가 수사기관인지 나꼼수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날 아침 7시55분께 검찰 내부계 시판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검찰청은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오는 7일까지 박 검사가 휴가를 쓰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의 사직을 만류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내일 신문 읽니다  
hani.co.kr 뉴스는 계속